

# ‘운영중단 위기’ 광주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예산 수혈

재정난으로 개관 1년여만에 전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광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수억원의 예산이 긴급 투입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 337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이 제출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진행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원을 긴급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

시비 출연금 2억8400만원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용자 1300여명, 상담·치유·재활서비스 재개 기대

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에 들어섰다. 2012년 광주 트라우마센터로 문을 연 뒤 2016년 국비 중단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돼 오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국가기관으로 전환됐다.

올해 운영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22억원이 책정됐으나 대선 이후 지난 8월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관련법에 부대조항이 신설되면서 재정 분담에 혼선이 빚어졌다.

광주시는 기관특성상 “100% 국가지원이 타당하다”며 분담금 일부를 책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상당수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고심 끝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치유를 의무화한 ‘5·18 정신계승

기본조례’도 고려했다.

안건 심의에서 시의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돕는 일인 만큼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시는 “공감한다.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센터에는 5·18 피해자 353명과 (유)가족 121명, 여순사건 314명,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사건 310명, 삼청교육대 28명, 남북귀환 어부사건 27명,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18명, 군대 내 인권침해 8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5명 등 모두 1340명의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가 30여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다. /오권철 기자

## 광주청, 캄보디아 실종 의심 사건 “총력 대응”

국내 캄보디아인 현지 지인 상대 실종자 제보 요청  
신고매뉴얼 및 구조요청법 전단 제작… 일선서 배포

광주경찰청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등 해외 출국 후 실종 신고가 이뤄진 이들에 대한 신속한 소재 확인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실종자 소재 확인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캄보디아인을 통해 현지 가족과 지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소재 탐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단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로 인해 유사 신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종자 구조 요청 방법, 대사관 연락처·주소 등 안내사항을 담은 전단도 제작해 배포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캄보디아 취업을 빙자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교육청과 협조해 학교전담 경찰관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종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번기 광주경찰청 행사과정은 “실종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하게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을 당해 숨진 대학생 사건 발생 이후 유사 실종 신고가 5건 접수됐다. /전민규 기자

## 광주 9~11월 가을산악사고 평균 95건… 무리한 산행자제

가을철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지난 2023년 302건, 지난해 320건, 올해 9월 기준 149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지난해 산악사고는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95건이 집중됐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코스와 기상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면 안된다.

또 무리한 일정과 단독산행을 자제하고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낙엽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산행 중 부상이나 길을 잃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산악위치표지판 번호를 함께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된다.

김희철 광주소방안전본부 119대응과장은 “광주지역 무등산과 어등산은 탐방객이 많아 산악사고가 잦은 지역”이라며 “가을철에는 해가 빨리 지고 일교차가 커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산악사고구조하는 광주소방. 사진=광주소방안전본부제공

## “지식산업센터 거주 가능” 건설사 대표, 사기 분양 ‘무죄’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개인 사기 행각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분양과 연관된 사기와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B(65)씨와 분양대행사 직원 2명, 건설사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시설로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쟁건 혐의 등으로 기소

“입주 공고·공급계약서·안내책자에 ‘거주 가능’ 문구 없다”  
분양대행사 임직원 무죄… 건설사 대표 개인 사기만 집행

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거용으로는 쓸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보기 집(모텔하우스)에 주방·가전·생활가구를 설치한 뒤 일지적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대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분양자들이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 ‘주거용으로 가능하다’ ‘대학 기숙사로서 숙식가능하다’는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알 수 없고 이를 추단(추정하고 단정)해서 유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 “분양자 중 법정 진술을 한 증인 모두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까지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설사 대표 A씨 또는 분양사 대표 B씨가 직원

들에게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분양하라고 지시 또는 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검사 제출 증거는 해당 매물이 주거용이 아니고 ‘거주용이 아니라는 공적 공고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등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2017년 1월 경기도내 한 도시 분양권과 나주 한 상가를 교환하는 계약 과정에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 3억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건설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분양자들이 A씨의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분양대행사 측 배상 책임만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다. /뉴스

## 광주지역 내 모 대안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위반 논란

대안교육 면적 미인가 유아교육 활용…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검토”

광주시교육청이 모 대안교육기관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한 행정처분만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6일 “시교육청은 A기관이 불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기관이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기관은 학생인권조

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교재 영상 공유,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기관에 대한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와 불법 유치원 운영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A기관이 대안교육으로 인가 받은 일부 면적을 유아교육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변경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A기관 측은 “별도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 ‘전남 공직사회 경직됐다’ 복종의무 위반징계 전국 최다

전남지역 공직사회가 전국 지자체 중 유독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사례가 많아 공직문화가 너무 경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7건 중 전남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23년에는 전국의 징계 건수가 115건이며, 이 중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뉴스

이어 전북이 27건(23.5%)으로 두 번째로 많고, 광주와 대전, 세종, 경기, 경남, 충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에도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 사회 내 복종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되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복종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